

17년 뒤 전남인구 168만명...10명중 4명 65세 이상 노인

전남도 22개 시·군 2017년~2037년 인구 변동 추계

모든 시·군 초고령사회 진입...여성 중위연령 환갑 넘어
전체인구 6% 줄고 유소년 인구 14만 5000명 36% 감소
나주·담양·구례·장성군 등 4개 시군은 인구 증가 예상

전남지역 인구가 매년 지속해서 감소해 오는 2037년 168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17년 10명 중 2명 수준이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37년 10명 중 4명꼴로 급증,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1일 전남도가 공개한 도내 22개 시·군별 장래인구 특별 추계(2017~2037)에 따르면 2037년 전남 인구는 168만 7000명(상주 인구 기준)으로 20년 전인 2017년 179만5000명보다 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군별 장래인구 특별 추계는 2017년 인구 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구 동향(출생 사망) 및 인구 이동 통계를 활용해 2037년까지 시군별 인구 규모와 성·연령별 구조를 예측했다.

2037년 시군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순천시(25만7000명·전남 전체 인구 대비 15.2%)로 예상됐으며 구례군(2만 6000명·1.5%)이 가장 적었다.

인구 감소세 속에서도 지역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곳은 나주시와 담양·구례·장성군 등 4개 시군이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영향으로 전입 인구가 늘어나 인구성장률이 타 시군에 비해 높고 다른 지역은 광주 인근 지역들이다.

도내 시 단위 5곳 중 나주시만 10만 4000명에서 13만4000명으로 인구가 늘고 목포·여수·순천·광양시는 모두 인구가 줄 것으로 예상됐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도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전남 서남부권인 목포(2017년 대비 -15.9%)·영암(-15.5)·해남(-13.5)·강진(-12.5%) 등의 감소 폭이 다른 시군보다 컸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38만 5000명에서 2037년 66만1000명으로 71.7%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37년 고령인구 비중은 39.2%로 2017년 21.5% 대비 17.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 현재 17개 시군이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전남은 2020년 무안군, 2121년 여수시, 2024년 목포

시, 2025년 순천시, 2028년 광양시를 끝으로 22개 모든 시군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2037년 고령인구 수는 여수시가 8만 7000명으로 가장 많고 진도군이 1만 2000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고령인구 비중은 고흥군이 56.4%로 가장 높고 광양이 31.1%로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 인구의 중위연령도 크게 높아져 2017년 46.6세에서 2037년에는 58.7세로 높아진다. 특히 2037년 전남 여성의 중위연령은 60.8세로 2017년 48.8세 대비 12.0세(27.3%)가 늘고, 남성의 경우 56.9세로 2017년 44.4세 대비 12.2세(27.3%)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37년 중위연령은 광양시가 53.7세로 그나마 가장 젊고, 고흥군이 67.7세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연령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에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이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유소년 인구는 크게 감소한다. 도내 유소년(0~14세) 인구는 2017년 22만8000명에서 14만5000명으로 36% 줄고, 유소년 인구 비중도 12.7%에서 8.6%로 감소한다.

2037년 유소년 인구 비중은 나주시가 11.3%로 가장 높고, 신안군이 4.2%로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유소년 인구 비중이 10% 이상으로 예상되는 시군은 목포·순천·나주·광양시와 무안군 등 5곳에 불과했다.

경제력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118만 2000명에서 2037년 88만1000으로 25% 감소한다.

전남 출생아 수는 2037년 8만4000명으로 2017년 11만4000명 대비 25.9% 감소하며, 목포·여수·순천시를 제외한 19개 시군 출생아 수는 1000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장래인구 추계는 인구변동 요인에 대한 특정 가정이 장래에 실현됐을 때 나타날 결과"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보건, 신도시 건설 등 정책변화 등으로 추계 변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을만큼 진척 이뤘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소개하며 관계기관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그동안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스스로 개혁을 이끈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

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격려성 발언은 정부의 개혁 작업에 대한 각 기관의 내부 반발을 다독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온 오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만 받으면 정해진 범위 밖의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하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관련 기관들이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첫걸음으로 신뢰를 키운다면 발걸음을 더 재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양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법무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신뢰를 보내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왔다. 아들 관련 의혹으로 야권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추 장관에게 ‘이제까지 잘 해 왔고, 앞으로도 잘해 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날 추 장관이 문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에 함께 입장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 준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이날 절차에 따라 참석자가운데 의견 서열이 가장 높은 추 장관이 영접 역할을 맡은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독대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지역 정치권 적극 행보...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논의 물꼬 트이나

광주시와 전남도를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행보로 구체화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이윤섭 광주시장의 제안에 따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례 모임을 공식화한데 이어 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오는 23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만나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전남에서는 시·도통합의 필요성과 해결과제 등을 사전에 검토·논의할 수 있는 ‘통합민간기구’를 먼저 만들어 한다는 제안도 나왔고, 시·도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장·지사와 민주당 시·도당위원장이 참석하는 ‘4자 연석회’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

내일 김영록 지사 만나

광주 국회의원 내달 시장 만남

21일 지역 정치권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국회의원과 김영록 지사 등이 23일 서울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전남지역 10명의 국회의원들과 전남도지사, 정부부지사, 실국장 등이 참석하며 의과대 설립 등 정책 건의, 국회 심의 과정서 지역 예산 반영 건의 등이 주로 논의된다.

또한 시·도통합과 광주공공항이전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전남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간진) 국회의원은 “전남지역 정치권에서는 일부가 시·도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각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도통합에 대한 의견 및 지역 여론, 전남지사와의 협업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면서 “이를 통해 시·도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구체적인 절차 등이 논의될 것이며, 광주지역과 충분히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시·도통합은 장기적 과제인 만큼, 절차 마련과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민간기구의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오는 10월 3일 이용섭 시장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지역 국회의원 8명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모임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용빈(광산갑) 의원은 “지역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 등을 위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힘을 보태기로 결의했다”면서 “시·도통합에 대한 서로 생각을 주고 받았고, 조만간 이 시장을 만나 구체적인 생각을 들어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전남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진행되면 조만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광주시당위원장, 전남도당위원장 등 4명이 만나는 ‘4자 연석회’를 통해 시·도 시·도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처음으로 주고받을 전망이다.

/오광록·김형호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정부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 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으로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

